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11. 16.(목) 19:00 배포 2023. 11. 16.(목)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1년 반 만에 3개 필라 타결

-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11.13.-14.) 열려
- 필라2공급망은 '23.5월 기타결, 필라3청정경제·필라4공정경제는 '23.11월 타결

◈ (필라2공급망) 국제 공급망 위기시 긴급 위기대응 네트워크 가동

◈ (필라3청정경제) 청정에너지, 탄소 중립기술 등 분야 최대 1,550억불 신규 투자

◈ (필라4공정경제) 부패방지, 조세 투명성 제고를 통한 무역·투자환경 개선

◈ (필라1무역) 상당한 진전 이루었으나, 추후 협상 계속키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호주, 태국, 인도 등 14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이하 "IPEF") 참여국들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장관회의(11.13~14)에 참석하여, 지난 일 년 반 동안 논의를 이어온 IPEF 협정의 성과를 발표하였다.

* IPEF :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피지 등 14개국 참여

참여국들은 금년 5월 이미 타결된 필라2 공급망 협정을 서명하고, 필라3 청정경제 협정과 필라4 공정경제 협정을 타결하였으며, 무역 협정의 경우 협상 진전을 확인하고 내년에도 협상을 계속해나가기로 하였다.

IPEF는 공급망, 기후변화 등 팬데믹 이후 새롭게 등장한 글로벌 도전 과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정상회의를 통해 출범한 협력체다. 지난해 9월에는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대 분야 협상을 추진키로 합의하였고, 지난해 12월부터 우리 정부는 산업부, 외교부, 기재부 등 관계 부처간 긴밀한 협의 하에 7번의 공식 협상과 수차례 장관회의, 회기간 회의 등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해왔다.

금번 IPEF 장관회의 계기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등 3개 협정이 모두 타결됨에 따라 전 세계 GDP의 40%, 상품·서비스 교역의 28%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 완성되었다. IPEF 출범 1년 반 만에 거둔 이 같은 성과는 IPEF 14개 국가들이 공급망 회복력·안정성 제고, 청정경제로의 조기 전환, 공정경제 구축이라는 목표를 위해 인태지역 내 공동의 대응·협력 체제가 시급히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목표에 공감하여 공급망 협정 협상 과정에서 공급망 교란 극복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 메커니즘을 제안하고, 금년 7월 IPEF 공식 4차협상을 부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협상 진전에 건설적으로 기여해왔다.

[공급망 협정(필라2)]

공급망 협정은 지난 5월 가장 먼저 타결되어, 금번 장관회의에서 서명되었다. 동 협정은 역내 공급망 위기 감지 시 위기 발생국 요청 후 15일 이내 정부간 고위급 협의체인 '위기대응 네트워크'의 가동을 통한 대체 공급처와 조달방안 마련은 물론, 공급망 병목점을 파악하여 기술협력과 공동투자기회 발굴, 관심 기업 간 매칭, 물류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한 공급망 다변화 등의 협력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한 공급망 교란 위기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IPEF에는 호주, 인도네시아 등 자원부국과 미국, 일본 등 기술 선진국간 협력으로 역내 공급망의 회복력·안정성을 높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동 협정은 내년 상반기 발효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정경제 협정(필라3)]

※ 청정경제 협정문은 법률검토 등을 거쳐 IPEF 참여국이 합의한 시점에 추후 공개될 예정

금번에 타결된 청정경제 협정은 에너지 전환, 산업 및 운송 분야에서의 배출가스 감축, 탄소시장 등 청정경제로의 전환에 있어서 참여국들간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예정이다. 특히, 원자력, 수소, 청정에너지 등 모든 청정에너지원을 포함한 에너지 생산과정에서부터, 탄소 저감기술, 탄소 거래시장까지 에너지 전 단계에서 기술, 규범, 표준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청정경제 기술 관련 연구개발, 정책 교류, 시범사업 추진, 인증 관련 협력 등도 확대해나가며 청정에너지 저장, 재생에너지, 탄소제거 등 핵심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 투자를 포함하여 2030년까지 약 1,550억불의 역내 신규 투자 창출 노력을 약속했다. 청정경제 협정은 향후 청정경제 관련 글로벌 규범과 표준을 확립해 나가는 중심축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실질적인 사업

기회를 도출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정경제 협정은 법률검토와 서명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중 발효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경제 협정(필라4)]

※ 공정경제 협정문은 법률검토 등을 거쳐 IPEF 참여국이 합의한 시점에 추후 공개될 예정

공정경제 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은 부패 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부패 공무원 징계 절차와 정부조달 과정에서 불법 행위 처벌 규정 정비 등이다. 아울러 조세 당국 간 활발한 조세 정보교환과 OECD 등 국제기구의 조세 이니셔티브 활용을 통해 조세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IPEF 국가의 청렴도가 전반적으로 증진되어 우리 기업에게 더욱 우호적인 사업 환경이 조성되고, 해외시장 진출시 이중 과세 우려 등 불확실성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경제 협정도 청정경제 협정과 같이 법률검토와 서명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중 발효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역 협정(필라1)]

IPEF 국가들은 무역협정과 관련해서 7차례의 공식협상과 수차례 장관회의 및 회기간회의 등을 통해 많은 진전을 거두었음을 평가하고, '24년에도 협상을 계속해나가기로 합의했다.

IPEF 국가들은 이번에 서명된 공급망 협정과 타결이 이루어진 청정경제 협정, 공정경제 협정으로 구축된 구체적인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향후 새롭게 등장하는 글로벌 현안에도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IPEF 전체를 총괄하는 「IPEF 장관급 협의체(IPEF Council)」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내년에 계속될 IPEF 무역협정 협상에도 우리 이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이 신속하게 발효되고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여타 IPEF 국가들과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1. 필라별 주요내용 및 의의·기대효과
참고 2. 구체 사례를 통해 본 IPEF 협정
참고 3. Q&A
참고 4. IPEF 개요

담당 부서	산업통상 자원부	인태통상기획팀(전반/필라1)	책임자	팀장 김이경 (02-2100-1370)
		신통상전략과(필라2)		과장 윤선영 (044-203-4870)
		기후에너지통상과(필라3)		과장 윤진영 (044-203-4890)
		통상법무기획과(필라4)		과장 손호영 (044-203-5940)
	기획재정부	통상정책과(전반)		과장 이재완 (044-215-7670)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총괄기획과(필라2)		과장 이진민 (044-215-7870)
		국제조세제도과(필라4)		과장 염경윤 (044-215-4650)
	외교부	IPEF 대응팀(전반)		팀장 조계연 (02-2100-6987)
		동아시아경제외교과(필라2)		과장 강여울 (02-2100-7675)
		기후변화외교과(필라3)		팀장 조은정 (02-2100-7859)
	산업통상 자원부	인태통상기획팀(전반/필라1)	담당자	사무관 노정림 (02-2100-1376)
		신통상전략과(필라2)		서기관 정문희 (044-203-4872)
		기후에너지통상과(필라3)		서기관 박근형 (044-203-4895)
		통상법무기획과(필라4)		사무관 이창우 (044-203-5942)
	기획재정부	통상정책과(전반)		사무관 하정현 (044-215-7672)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총괄기획과(필라2)		사무관 장상희 (044-215-7873)
		국제조세제도과(필라4)		주무관 신진욱 (044-215-4656)
	외교부	북미경제외교과(전반)		사무관 연동현 (02-2100-7685)
		동아시아경제외교과(필라2)		사무관 박성찬 (02-2100-8573)
		기후변화외교과(필라3)		사무관 황유리 (02-2100-7748)
		에너지과학외교과(필라3)		사무관 이채원 (02-2100-838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참고자료 1 : IPEF 분야별 주요내용 및 의의 · 기대효과 】

1. 필라2 공급망 협정 → "서명 완료 후 신속 발효 추진, 위기대응 네트워크 가동으로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를 위한 초석 마련"

주요 내용

내용
공급망 위기시 협력 가능한 메커니즘 마련·운영
• (모니터링) 각국의 공급망 취약성 모니터링 역량 강화 • (CRN) 위기발생시 정부간 정보공유 및 신속·효과적 공조를 위한 위기대응 네트워크 운용 (15일 이내 정부간 고위급 협의 진행, 대체 공급처 파악 등)
평시에도 공급망 협력 강화
• (협력) 물류 인프라 확충, 통관원활화, 투자 촉진, 중소기업 역량 강화 등 • (액션플랜팀) 참여국 공통의 관심분야·품목 중심으로 심화된 협력방안 도출 • (공급망위원회) 협정문 이행 점검, 역내 모범사례 발굴 등 논의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조치 대응
• (정부조치)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조치 자제, 조치 채택시 의견수렴 및 정보 제공 근거 마련 • (협의) 상대국 조치에 대한 우려시 신속한 협의 가능
공급망 관련 노동환경 개선
• (숙련노동자)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적인 숙련노동자 육성 • (노동권 자문기구) ILO·국내법에 근거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각국의 노동권 관련 현황 파악 및 개선사항 발굴

의의 및 기대효과

IPEF 공급망 협정은 금년 5월에 조기 타결되고 금번 11월 장관회의 계기 서명되는 등 신속한 발효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공급망 협정은 공급망과 관련된 최초의 다자 국제협정이며, 특히 IPEF에는 인도네시아, 호주 등 자원부국과 미국, 일본 등 기술선진국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만큼, 공급망

협정을 통해 공급망 위기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공급망을 다각화하여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공급망 위기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국제협력 메커니즘 운영
“15일 내 대체 공급처 확보를 위한 「위기대응 네트워크」가동”

공급망 협정을 통해 공급망 위기시의 협력 메커니즘이 새롭게 마련되어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공급 차질이 생기는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대체 공급선 확보를 위해 여러 나라의 담당자를 파악하고 접촉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공급망 협정이 발효되면 공급망 위기 발생국 요청 후 15일 내에 IPEF의 위기대응 네트워크가 가동되어 다양한 공급망 강점을 가진 14개국에 대체 공급처 관련 정보 등을 요청하고 필요시 품목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협조도 받을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위기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 광물 등 주요 원부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에게 특히 유용한 협력 메커니즘이다.

공급망 협력 상시 협의 메커니즘 구축·운영
“공급망 복원력 증진을 위해 평시 투자 확대 및 물류 개선, 공동 R&D 수행”

IPEF 국가 중 보다 심화된 협력을 희망하는 공통 분야가 있을 경우, 수급 다변화, 인프라 확충, 기술 협력, 물류 인프라 확충, 공급망 병목점 해소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시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핵심광물의 단일 국가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하여 IPEF 국가 중 호주, 인니 등 자원 보유국 및 베트남, 인도 등 주요 생산기지와 함께 투자 활성화, 물류 개선, 공동 R&D 등을 등 공조를 진행함으로써 대체 공급선 확보 및 공급망 다각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우리는 리튬, 코발트, 흑연 등 핵심광물 수요의 대부분(95%)을 해외 수입에 의존('22년)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조치에 대한 사전 대응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최소화, 특정국 조치시 협의기회 확보 용이”

마지막으로 우리와 긴밀한 교역관계를 갖고 있는 IPEF 국가의 조치로 인해 공급망 교란이 발생하는 경우, IPEF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먼저 각 국은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조치 발동 자체를 자제하기로 했다. 또한, 불가피하게 이러한 조치를 발동하는 경우에도 IPEF 를 근거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자 협의를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우리 공급망이 정부 조치에 따라 영향을 받았을 경우 해당 정부와 협의할 기회 자체를 마련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었다. 그에 비하여, IPEF를 활용하면 정부 정책에 따라 발생하는 공급망 위기 자체를 최소화하고, 대화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게 되어, 공급망의 안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행을 위한 준비

IPEF 국가들은 공급망 협정 실질 타결 및 서명 진행 후, 신속한 발효 준비에 돌입했다. 아울러, 공급망 모니터링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위기대응 네트워크 관련 훈련에 참여하는 등 공급망 위기에 공조·대응하기 위한 실질 협력은 이미 시작되었다.

2. 필라3 청정경제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청정에너지 관련 투자 확대 약속, 관련 시장 형성으로 우리 기업 진출 기반 마련"

주요 내용

내용
에너지 안보 및 전환
• 인프라, 기술, 상호 인정된 표준, 방법론, 인증에 대한 협력을 통해 국경을 넘는 비즈니스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역내 상호 연결을 강화 • 고품질의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실행가능한 전력망 및 미니 그리드 개발을 지원하는 등 재생 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및 에너지 보존을 촉진 • 2030년까지 전 세계 인위적 메탄가스 배출을 감소
산업 및 운송 분야 배출가스 감축
• 친환경 운송 통로 구축, 지속가능한 항공 연료의 생산 및 가용성 증대, 녹색해운항로 네트워크 개발, 무공해 운송을 지원하는 인프라 및 차량 확대 • 혁신적인 청정기술 통합, 청정 에너지 공급망 촉진, 탈탄소화 프로젝트 참여에 중점을 둔 역내 경제 클러스터 발전
지속가능한 토지, 물, 해양 해법
• 산림 및 기타 자연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관리, 보존, 복원을 위한 노력을 강화 • 투자 촉진, 연구개발 촉진, 역내 및 국제 CCUS 밸류체인에 대한 협력 • 자연기반 솔루션 및 생태계 기반 접근법으로 간주되는 해양기반 솔루션 및 지속가능한 물 솔루션 추진을 위한 조치 가속화
청정 경제 전환 인센티브
•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배출량이 낮거나 제로인 상품·서비스의 수급 강화 • 검증된 저탄소 또는 무탄소 배출 전기에 의해 공급망이 지원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의 선호를 인식 • 탄소크레딧 인증기준, 탄소시장 참여 역량 강화, 고품질 저감활동 활성화 등 탄소시장 개발 및 참여에 있어 협력 추진
투자
• 지속가능한 금융 및 전환금융 촉진, 혁신적인 금융메커니즘 육성, 안정적이고 보다 원활한 규제 및 정책환경 조성, 금융에 대한 상호 운용성 촉진 • 혼합금융 추진, 보증 및 위험보험, 강력한 노동권과 환경보호에 부합하는 기술지원, 기후 프로젝트 파이프라인 개발, 민관 파트너십 형성 • 연례 IPEF 청정경제 투자자 포럼을 개최 • 청정에너지저장(1200억불), 재생에너지(200억불), 탄소제거(최대 150억불) 등 분야에서 역내 최대 1,550억불 신규 투자 창출
워크프로그램
• 공동의 목표를 향해 그들의 관심사와 자원을 우선시하기 위한 협력작업프로그램(CWP)을 만드는 메커니즘 제공 • 청정 전기, 탄소시장, 수소, 바이오항공유, 에너지 저장 등 새로운 CWP를 탐색

의의 및 기대효과

핵심 글로벌 도전과제인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정경제 협정을 타결하고, 청정경제 전환을 앞당길 협력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는 향후 청정경제 관련 글로벌 규범과 표준을 확립해 나가는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정경제 협정은 친환경 정책 정보 교류 등 공조뿐만 아니라 분야별 협력 프로그램(work programme)을 발굴·수행하여 실질적인 사업 기회를 도출하고 인태지역내 투자를 촉진한다. 이에 따른 인프라 투자 확대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정경제 전환을 위한 정책 협력 강화 및 민간 참여 확보
"청정에너지 관련 산업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강화"

먼저, 원자력, 수소, 재생에너지 등 모든 청정에너지원을 포함한 에너지 생산과정에서부터 탄소 저감기술, 탄소 거래시장까지 에너지 전 단계에서 기술, 규범, 표준에 대한 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이 분야에서 민간부문의 연구개발, 신규 투자를 독려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청정전기 인증, 탄소시장 호환성, 안정성 등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정책 교류를 확대한다. 또한, 인태지역의 무공해차의 점유율을 점차 확대 노력키로 하고, 바이오항공유 활용 확대 등을 통한 항공부문의 탄소저감도 추진해나간다. 이러한 협력활동은 청정에너지 비즈니스 활동이 국경을 넘어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것에서 나아가 청정에너지 산업의 시장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자력, 수소, 재생에너지, 탄소시장 및 탄소 저감기술 등 협력 사업 발굴·추진
"선진국-개도국간 기술협력을 위한 13개 협력 프로그램 운영"

아울러, 청정경제 기술 관련 연구개발, 정책교류, 시범사업 추진, 인증 관련 협력 등도 확대해나가기로 하였다. 현재까지 탄소시장, 청정전기, 수소, 바이오 항공유, 에너지 저장, 메탄 감축 등 13개 협력 프로그램이 추진될 예정이며 향후에도 새로운 협력 프로그램도 발굴해나갈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탄소시장, 청정전기 관련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키로 하였다. 이는 새로운 혁신기술 투자를 증가시켜 청정기술 활용 규모를 극대화하고, 비용절감 효과를 높일 뿐만 아니라 국내외 투자를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에서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여 이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정에너지 저장, 재생에너지, 탄소제거 등 투자 확대
"청정에너지 저장, 재생에너지, 탄소제거 등에 2030년까지 1,550억불 투자"

기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 파이프라인 개발, 민관 파트너십 활성화를 통해 청정에너지 분야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청정에너지 저장, 재생에너지, 탄소제거 등 핵심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 투자를 포함하여 2030년까지 약 1,550억불의 역내 신규 투자 창출 노력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청정에너지 시장이 활성화되고 우리 기업의 사업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4. 필라4 공정경제 → “반부패 실현, 조세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환경 조성, 인태지역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

주요 내용

내용
반부패(Anti-Corruption)
• ▵국내외 뇌물, 자금세탁의 범죄화, ▵회계, 감사 시스템 도입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법률을 효과적으로 집행
• 범죄수익을 식별, 추적, 동결, 환수하기 위한 조치 및 환수된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의 투명성,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
• 민간 부문의 ▵부패 척결 과정 참여를 증진하고, ▵부패 범죄에 대한 공공 인식을 제고하며, ▵적절한 내부 통제, 반부패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을 장려
• ▵자금세탁 방지 관련 법률·제도상 공백을 조정하고, ▵부동산 거래, 정부조달 등에서 법인 실소유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의 표준에 맞는 제도 도입
• 개인의 반부패 신고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및 절차를 도입
• 반부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공무원의 청렴성 증진을 위한 조치를 시행
• 정부조달 과정의 부패행위 및 기타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민사, 형사, 행정상의 조치를 도입하고, 투명하고 모범 기업운영 사례를 축적한 입찰자와의 계약을 장려
• UN 반부패협약(UNCAC) 이행점검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관계자 참여나 후속조치 공유 등 투명성과 포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
• ILO 선언문에 언급된 기본원칙을 존중, 증진하고, 적절한 경우 노동권 존중을 확보하며, 각국 노동법 하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
조세(Tax)
• 조세 투명성, 조세 정보의 교환, 국내 자원동원, 조세 정책의 효율화 노력을 인정
• 효율적인 조세 행정을 발전시키기 위한 역량강화 지원을 지지
역량강화, 기술혁신, 포용
• 참여국은 협정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역량강화 프레임워크(CBF)를 설립하며, 역량강화의 방법, 수요평가, 절차 등 기본원칙을 수립
• CBF에 대한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 수요 제출 등 정보교환을 통해 협정문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
• 협정문 이행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증진하고, 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민간 부문의 협력 증진을 위한 대화를 활성화
• 반부패, 노동, 조세의 이행 및 기술지원을 위한 회의를 연 1회 개최
일반 및 최종 조항
• 협정문 이행과 관련된 애로가 있는 참여국은 ‘협의’ 조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협의 조항에는 상황의 평가 및 해결책을 제안할 수 있는 임시위원회 포함

의의 및 기대효과

IPEF 공정경제 협정은 뇌물, 자금세탁 등 부패를 근절하고, 관련 국제 협약(UN 반부패 협약 등) 상 의무 이행을 강화하는 동시에, 조세 행정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인태지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정부 부문 부패와 정부조달 시장의 불투명성 등을 해소하여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부패 실현

"신고자 보호, 부패 공무원 징계, 정부조달 투명성 강화, 부패 범죄수익 환수, 자금세탁 방지"

인태 지역의 공직자 청렴도와 사회 전 분야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부패 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부패 공무원 규제를 위한 징계 절차 및 정부조달 과정에서 불법 행위 처벌 규정 정비와 함께 부패 범죄수익 환수 및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이 강화될 것이다. 이는 우리 기업의 해외 신규 진출시 장벽을 낮추고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사업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세 투명성 제고

"조세 정보의 교환, 조세행정 효율성 제고로 향후 이중과세 방지효과 기대"

아울러, 조세 당국 간 활발한 조세 정보교환과 OECD 등 국제기구의 조세 이니셔티브 활용을 통해 조세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 수반되는 이중과세 우려 등 불확실성이 감소함에 따라, 인·태 지역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국 역량강화

"온라인 정부조달, 반부패 프로그램, 조세행정 선진화를 위한 개도국 역량 강화"

공정경제 협정에 따른 반부패, 조세 투명성 등 의무는 개도국들에게 새로운 법과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의 원활한 협정 이행을 위해 선진 행정 시스템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참여국들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하였다. 우리나라는 협상 과정에서 개도국 이행 지원방안으로 온라인 정부조달 시스템, 반부패·청렴 프로그램을 소개한 바 있으며, 향후 발효 이후에도 개도국 이행 관련 지원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5. IPEF 전반 → 장관급 협의체 가동, 협정 이행 및 신이슈 논의 강화

IPEF 4대 분야 협정문 합의와 함께 IPEF 협정의 효율적인 이행을 담보하고 새로이 부각되는 글로벌 통상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관급 협의체를 구축, 정기적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IPEF에 관한 협정은 독립협정으로 구성된 4개 필라 전체를 관장하기 위해 장관급으로 구성된 최고기구인 'IPEF 장관급 협의체'를 설립하고, 필라2-4(필라2공급망·필라3청정경제·필라4공정경제)를 관할하는 '공동위원회'와 필라1(무역)을 관할하는 '무역위원회'를 두어 IPEF 개별 협정의 운영을 관리한다.

IPEF 장관급 협의체의 주요 임무는 IPEF의 4개 필라 전체와 관련된 협정의 공동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신규 참여국 또는 새로운 협정의 추가 가능성 검토이다. IPEF 장관급 협의체와 공동위원회는 매년 같은 시기에 개최될 예정이다.

【 참고자료 2 : 구체 사례를 통해 본 IPEF 협정 】

1. 필라2 : 공급망

□ 공급망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위기대응네트워크***을 구축하고, **상대국 조치에 대해 우려 시 신속한(60일내) 협의 규정** 등

* Crisis Response Network : 위기시 참여국간 정보 공유 및 공조를 위한 고위급 협의체

【 예 시 】

- 특정품목(예: 니켈)에 대한 불안 포착 → 정부간 고위급 회의 개최 및 공조방안 모색

<현행>		<개선>
특정품목 수급위기시 타국 담당자 개별 확인 및 접촉 등에 상당시간* 소요 * (예) 요소수 사태 인지('21.10.21일) → 대체공급선 발굴 후 반입(11.11일, 호주)까지 약 3주 소요	⇒	공급망 위기 발생시 빠르고(15일 이내 회의 개최) 효율적으로(13개국 대상) 공조 요청 가능

- 수출통제 조치 → IPEF 협정상 조항을 근거*로 협의 요청(20조) → 상대측 회신 → (우려 미해소시) 회신 60일 이내 협의 개시 의무

<현행>		<개선>
조치 발동국의 협의 의무 無	⇒	상대국 요청시 조치발동국의 신속한 협의* 및 상호 합의를 위해 노력할 의무 * 협의요청 → 회신 → 60일이내 협의 개시

2. 필라3 : 청정경제

□ 참여국 간 **탄소시장, 청정전기, 수소, 에너지 저장 등 협력 프로그램 추진 합의 ⇒ 투자 프레임워크를 통한 협력 활성화**

【 예 시 】

- 투자 프레임워크를 통해 파일럿 프로젝트 및 인프라 개발을 지원

<현행>		<개선>
1. 높은 투자위험 및 자본 조달 어려움으로 청정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인태 지역 국가에 투자결정 지연	⇒	에너지저장시설, 재생에너지, 탄소저감 등 분야에 2030년까지 약 1,550억불 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 합의
2. 역내 청정경제 관련 사업에 대한 자본 공급자-수요자 간 정보 불충분		투자자 포럼으로 프로젝트-투자자를 연결 -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접근성 확대로 우리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에 기여

• 역내 수소 공급망 협력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현행>		<개선>
1. 우리 기업 높은 기술력에도 불구, 안정적 수소 공급처 부재로 사업화 난망 2. 각국 수소 관련 지식수준 상이	⇒	관련 전문성 공유, 국제 표준의 확산 지원 및 저탄소 수소 보급 협력 - 역내 수소 공급 안정화, 수소 활용 확대

3. 필라4 : 공정경제

□ 반부패 관련 **법·제도 집행 강화, 공직자 청렴도 개선, 신고 시스템 구축** 장려, **역량강화**를 통해 **반부패 대응역량 강화** 등

【 예 시 】

• IPEF 참여국 내의 반부패 관련 법·제도 정비 및 공무원·민간 부문 청렴도 개선

- 사회 전반의 반부패 실현을 통하여 정경유착, 기업간 카르텔 형성 등 경영 활동과 관련된 불안 요인 제거

<현행>		<개선>
부패방지 시스템 미비로 현지 정부와 독점기업 간의 유착관계 고착화 및 시장진입 장벽으로 작용 *(예) 참여국 A내에 부패정부-기업 간 정경유착 행위 발생	⇒	공직자뿐만 아닌 민간 부문의 반부패 실현으로 전반적인 경영 환경 개선 → 우리기업의 현지진출에 긍정 요인 *(예) 필라4 반부패 협정문 이행을 통한 시스템 개선으로 부패 관행 철폐

• 기술지원 희망 국가에 우리나라 전자정부조달 시스템 구축 지원

- 수혜국 내 정부조달 분야의 반부패 실현, 비효율성으로 인한 기업·정부 예산 낭비 방지 등 공공투자 분야의 효율성을 제고

<현행>		<개선>
정부조달과 관련된 부패방지 제도 및 전자정부조달 시스템 미비로 현지 조달 시장 진출 애로 *(예) 참여국 A내의 효율적인 정부조달 시스템 미비로 우리 기업의 현지 조달 시장 참여 애로	⇒	제도 개선으로 해외 공공조달 과정에의 우리 기업 참여 기회 확대 → 수출·해외투자에 긍정 요인 *(예) 참여국 A 등에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 기업의 참여 촉진

【 참고자료 3 : Q&A 】

Q1. 필라별 발효 일정 등 향후 계획은?

□ 금번에 서명한 필라2 공급망 협정은 참여국들의 국내 절차를 거쳐 금년 말 또는 내년 상반기 중 발효될 것으로 예상

□ 필라3 청정경제, 필라4 공정경제 협정도 내년 하반기 내 발효될 것으로 예상

□ 필라1 무역 협정은 추후 협상 결과에 따라 발효 일정은 달라질 전망

Q2. 필라1이 타결되지 못한 이유? 향후 협상을 지속할 예정인지?

□ 그간 수차례의 협상 결과, 필라1 무역 세부 분야별로 (진전 속도는 상이하지만), 상당한 진전을 거둔 상황임

○ 다만, 협상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참여국간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번에는 구체적인 협상 결과를 발표하는 대신 “후속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는 합의 사항을 발표하게 된 것임

□ 필라1 무역 협정 협상 타결이 무산되거나 결렬된 것이 아니며, 필라1의 협상 시한이 연장된 것임

※ ’23.12월부터 필라1 추가 협상이 예정되어 있으며, 최대한 이른 시기에 협상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

Q3. 필라1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분야는?

□ 노동, 환경 등 분야에서 각국의 정책과 관련 법령 등이 상이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며, 향후 협상 과정을 통해 상호간 이견을 수렴해가는 절차를 가질 것으로 예상됨

Q4. 필라1에 인도가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 IPEF는 기존 FTA와 달리 관세 인하를 통한 시장개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선진 무역 규범 도입과 참여국간 협력 증진이 중심임

○ 인도는 옵저버(observer) 지위를 가지고 필라1 협상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인 바, 향후 참여 여부를 참여국간 지속 협의해 나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Q5. CF100 관련 논의가 IPEF에서도 다루어지는지?

□ 원자력, 수소 등 분야에서 기술협력 및 정책교류를 확대하는 등 CF100에서 핵심이 되는 요소들이 필라3 청정경제에서 많이 논의되었으며, 협정문에도 일정 부분 반영 되어 있음

【 참고자료 4 :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개요 및 진행경과 】

명칭	•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배경	• 팬데믹 계기 글로벌 통상환경이 "효율성"에서 "회복력"으로 중심축이 이동하며,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력 중요성 증대 • 공급망·기후변화·디지털 등을 중심으로 인태지역 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출범한 새로운 경제통상협력체
참여국 (14개)	•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피지 **IPEF에 참여하는 14개국을 기준으로, 全세계 인구의 32%, GDP의 40%에 해당**  ※ 기준:'22년, 출처:통계청, 한국무역협회(KITA)
필라(분야) (4개)	• 무역(필라1) : 美 USTR 담당 • 공급망(필라2), 청정경제(필라3), 공정경제(필라4) : 美 상무부 담당
분야별 협상참여국	• 인도를 제외한 13개국은 4개 분야 모두 참여 (인도는 무역 불참 /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참여)
협상 경과	• '22. 5. 23, 출범 • '22. 9. 9, 4개 분야별 각료선언문 발표 • '22. 12. 10-15 / 호주, 1차 협상 • '23. 2. 8-11 / 인도, 특별협상 (필라2·3·4 협상만 진행) • '23. 3. 13-19 / 인도네시아, 2차 협상 • '23. 5. 8-15 / 싱가포르, 3차 협상 • '23. 5. 27 / 미국, IPEF 장관회의, **필라2 공급망 협정 타결** • '23.7.9-15 / 한국(부산), 4차 협상 • '23.9.10-16 / 태국, 5차 협상 • '23.10.14-24 / 말레이시아, 6차 협상 • '23.11.5-12 / 미국, 7차 협상, **필라2 공급망 협정 서명 및 필라3 청정경제 협정·필라4 공정경제 협정 타결**